

“올 보훈예산 5조원 ↑ ... 역사상 처음”

이낙연 총리 “전년대비 11.2% 증가한 수치 보훈 일 제대로 하겠다는 文 정부 굳은 다짐”

이낙연 총리는 8일 “올해 보훈 예산이 역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고, 1년 전 보다 11.2%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보훈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굳은 다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는 보훈해야 할 일이 많은 나라”라며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고 내전을 겪었고, 또 민주화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해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 굉장히 많았던 역

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 다행인 것은 예산 심의할 때 국회에 가면 보훈예산을 늘리지는 데는 여야가 별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욕심을 내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안과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개선안이 올랐다.

이 총리는 먼저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에 대해 “예전보다 개념이 확대된다”며 “민주화 유공자와 6·25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보훈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독립 유공자 포상심사기준안과 관련해서는 “여성 독립 유공자에 대해서 남성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운을 뗐다.

이 총리는 “일제시대 상황으로는 여성이 독립 운동을 함께 하는 데 제약도 많았을 테고,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남성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여

성 독립운동가를 인정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기준을 재고해보자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특정한 여성 유공자의 등급을 올리는 접근은 쉽지가 않기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면 유공자 선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명이나 학생, 여성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수행·육고 위주의 포상 기준을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경우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뉴스1

“선거때마다 가정 무너져... 가족얘기 말라”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형수 박인복씨 “억울하고 절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형수인 박인복씨는 8일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 “슬픈 가족사라고 무슨 작품을 쓰듯이 각본을 쓰고 제작하지 말고 제발 우리 가족 얘기를 이후엔 하지 말라”고 이 후보에게 경고했다.

박씨는 이날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 주선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2012년 당시 막말 파일이 돌아갈 땐 조작된 파일이 돌아다니는 것이고 자기는 (막말을) 한 적도 없다고 무조건 우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2014년이 되니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때 (이 후보는) 슬픈 가족사라고 하면서 ‘형님이 어머니 집에 가서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나는 형수에게 욕을 했는데, 형수에게 한 욕을 조작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했다”며 “그때 시인한 것이다. (욕설을) 했다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후에) 이 후보가 대선 예비후보가 됐다. 그러더니 이전 ‘형님 부부’가 어머니 집에 가서 패륜 행위를 하며 때리고 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막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자기 해명을 했다”고 이 후보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는 주장을 폈다.

박씨는 이 후보를 향해 “제발 거짓말을 그만하라. 자기의 진실(거짓으로) 해명하려 노력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가족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그는 얼굴을 드러내면서까지 공개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억울하고 절통해서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꺼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용기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형수가 욕해서 막말을 했다’라고 말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럼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각인이 되겠다.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폭언한 여자로 되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뉴스1

도내 단체장 후보자들 “사전투표했어요”



1. 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지3동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효지3동주민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후보(오른쪽)가 부인 오경진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2.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신동사무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왼쪽)가 배우자 류진영씨와 함께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지방선거 이색 홍보영상 ‘눈길’

전북선관위 제작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색 홍보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준비기간인 2월 말부터 패러디 붐을 일으켰던 평창올림픽 컬링 경기를 투표참여 주제로 패러디한 영상을 시작으로 기부행위 예방 안내부터 개표 관리에 필요한 투표지분류기를 연습하는 소리까지 선거관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을 ‘선거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영상으로 유쾌하고 해학적으로 풀어냈다.

또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대화를 통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가 위반됨을 알려주는 ‘고향에서 온 편지’, 근로자의 (사전) 투표시간 보장을 안내하는 ‘개미와 베짚이’ 등을 제작해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선거 정보 등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했다.

한편 이 영상들은 한국선거방송(KT올레TV 273, 티브로드 205) 및 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5·18 성폭력 진상규명 착수

여가부·인권위·국방부
조사단 출범... 10월까지 활동
피해접수·진상조사와
군내외 자료조사 진행
전화·온라인 등으로 신고

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군내·외 진상조사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군내부 진상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5·18 관련 기록은 기무사, 육군 등 취합해 보관 중이며 60만 쪽 분량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공동조사단)이 8일 출범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방부는 이날 오전 공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여가부와 인권위에서 각각 3명이, 나머지 인력은 국방부에서 파견됐다. 공동조사단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 202호다. 활동기간은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접수·조사, 군내·외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된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한다. 또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

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5·18 관련 단체들과 협력도 강화한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와 서울 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여가부·인권위·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전화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접수도 이뤄진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12일 오후부터 실시한다. 방문접수는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 해바라기센터와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뉴스1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